

배포 2026. 10. 29.(목)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0. 30.(금) 06:00
(지 면) 2026. 10. 30.(금) 석간

교육부,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

- 대상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체계 구축', 이 외 '대안교육기관 제도 개선', '방과후드림' 등 국민 체감·현장 혁신성과 선정
- '교복가격 개선' 등 교육분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우수과제도 함께 시상
- 10.30.(금)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2027년에도 지속 발굴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시상한다.

교육부는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격려하고자, 올해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이번 제3회 시상식에서는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6건(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2건)을 선정하였다.

최고 영예인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이진구 사무관 외) 사례가 차지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과 해킹 시도에 맞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최우수 성과로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한 '인공지능(AI) 교과 인정교과서·교육자료 개발'(김채원 교육연구사 외), ▲건축물 용도 신설로 약 1만 1천 명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조재현 사무관 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 업무처리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학부모의 편의성과 현장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방과후드림 플랫폼 구축'(김재용 주무관 외) 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 성과로는 ▲장기간 답을 찾지 못하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임동우 서기관 외), ▲60여 년간 수기로 운영되던 행정을 전산화한 '재외한국교육원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강효곤 사무관) 사례가 선정되었다.

※ 선정 사례별 '주기여자'만 표기, '보조기여자' 포함 수상자 상세 명단은 [붙임3] 참조

대상인 ‘전체 교육기관과 실시간 연동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이진구 사무관 외)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 위협(‘21년 3억 건→’26.9월 4.1억 건) 속에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인공지능(AI) 보안관제 대응을 시행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건수를 이전보다 117%(‘21년 42,564건→’26.9월 92,420건) 증가시키고, 실제 침해사고를 급감(‘23년 55건→’26년 10월 9건) 시켰다. 특히, 해당 사례는 ▲중앙부처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모델(탐지·판별·통보)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 점, ▲차세대 탐지 장비를 시도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 등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실시간 연동된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최우수’ 수상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없는 인공지능(AI) 교과」, 교원 99명이 쓰다’(김채원 교육연구사 외) 사례는 인공지능(AI) 관련 과목의 교과서가 없어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직접 만들던 고충을 해결하고자, 초중고 16개 과목의 교과서 개발을 지원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본 원리는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은 수시로 현행화가 가능한 ‘교육자료’에 담는 구조를 최초로 설계하고 현장 교원 99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61.3%(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사의 수업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조재현 사무관 외) 사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21)되어 대안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기관이 시정 명령 및 폐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동시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 253개 대안교육기관의 약 1만 1천 명 학생이 이전이나 용도변경 없이, 쓰던 건물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스무 살 방과후학교의 이유 있는 변화, 「방과후드림」 플랫폼’(김재용 주무관 외)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도입에 맞춰 웹 기반 플랫폼(모바일 연동)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별도 앱 설치 없이 자녀의 지원금 잔액, 사용 이력, 수강 과목 정보 및 주간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간편

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편결제 연계를 통해 지원금이 자동 차감·결제되고 케이(K)-에듀파인 연계 정산 자료가 자동 생성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수기 관리 및 회계·민원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해소했다.

다음 ‘우수’ 수상 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임동우 서기관 외) 사례는 사안별 대응에 그쳤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폐쇄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지원, 편법·부실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외한국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강효곤 사무관) 사례는 1963년 개원 이후 60여 년간 수기로 관리되어 오던 해외 한국교육원의 행정 업무(실적·복무·문서·회계)를 최초로 전산화했다. 수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서 및 회계서류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여,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함께 시상하였다.

< 교육정상화 우수부서 >

- ①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평생학습정책과)
- ② 교복제도 개선(학생지원총괄과)
- ③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및 의무설치 조항 합리화(영유아정책총괄과)
- ④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영유아사교육대응팀)
- ⑤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예산담당관)
- ⑥ 학교급식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근거 마련(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는 2026년 거둔 결실에 이어, 2027년에도 국민의 삶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한다.

이번 대면평가에 참여한 이찬규 평가위원은 “공무원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로 뚫은 ‘내적 동기’ 기반의 성과들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라며,

“자발적인 혁신 시도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국 교육 현장으로 지속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사례들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 개요
2. 2026년 교육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개요
3. 특별성과 우수사례(6건)
4. 교육정상화 우수부서(6건)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정원숙 (044-203-6062)
		담당자	서기관	이인숙 (044-203-6063)
			주무관	한유진 (044-203-6068)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책임자	과장	이지선 (044-203-6026)
		담당자	서기관	백봉현 (044-203-6029)
			주무관	서나랑 (044-203-6038)

붙임 1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 10. 30.(금), 11:00~11:20(20분)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520호)
- (참석자) 교육부 장관, 수상자 등

□ 주요 내용

- 특별성과 우수사례 선정 직원 시상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00~11:02	2'	• 개회	공개
		•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6건 - [대상 / 1,000만 원] 1건 ① 이진구 사무관 정재화 사무관 김현동 주무관 김세진 주무관 - [최우수 / 500만 원] 3건 ① 김채원 교육연구사, 전구슬 교육연구관 ② 조재현 사무관 김중범 주무관 박민영 사무관 박경신 주무관 ③ 김재용 주무관, 전민환 서기관, 김혁연 교육연구관, 홍용환 사무관, 강동훈 교육연구사, 서보승 주무관 - [우수 / 300만 원] 2건 ① 임동우 서기관, 김승훈 주무관, 조재현 사무관, 박인환 사무관, 진민택 사무관 ② 강효곤 사무관 • 교육정상화 우수부서 포상금 수여 : 6건, 각 150만 원 ①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평생학습정책과) ② 교복제도 개선(학생지원총괄과) ③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및 의무설치 조항 합리화(영유아정책총괄과) ④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영유아사교육대응팀) ⑤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예산담당관) ⑥ 학교급식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근거 마련(학생건강정책과) ※ 기념 촬영 포함	
11:02~11:17	15'		
11:17~11:20	3'	• 인사말씀(교육부 장관)	

□ **제도 개요**

- (개념)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26년 신설)
-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
 - *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운영 방향)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개인)를 최우선으로 선발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 동력 정착 유도

□ **세부 운영기준**

- (추천 대상) 본부 무보직 4급 이하, 무보직 장학관 이하
 -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 개인(업무줄 포함) 추천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과·팀 전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성과 결과일 경우 예외적으로 과·팀 전체를 추천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발굴 분야) ①국가 및 국민 이익 증진, ②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③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④기타(기관장이 인정한 우수사례)
- (선정 절차) 1차 심사(전문가 서면심사+국민투표) → 2차 대면평가(전문가+동료)
 - ※ 제1회 포상금 대상자 선정은 '25년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해 전문가 서면심사 후 자체심사위에서 결정(신속 추진)
 - (추천) 관리자나 동료 등이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추천
 - (시상) '26년 총 3회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 확정·시상 예정

□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추진 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9.2.~9.17.	•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추진 안내 및 접수	
9.21.~9.30.	• 1차 전문가 서면 심사 및 국민투표, 동료평가자 모집	
10.20. 13:30	• 2차 대면평가(전문가 심사단 4명+동료평가자 10명)	현장발표
10.30. 11:00	•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교육부 장관)	

붙임 3

특별성과 우수사례(6건)

연번	수상자	주요 성과
1	<p>[대상] (주) 이진구 사무관 (보) 정재화 사무관, (보) 김현동 주무관, (보) 김세진 주무관</p>	<p>■ 전체 교육기관과 실시간 연동되는 '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안전망 혁신) 중앙부처 최초로 탐지부터 판별·통보까지 수행하는 'AI 보안관제'를 고도화(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침해 탐지·대응 건수를 117% 증가시키고, 실제 해킹사고를 급감('23. 55건 → '26.10월 9건)시켜 교육기관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노력함 ○ (국가 예산 절감) 고성능 '차세대 탐지장비' 자체 개발·보급(339억 원 절감) 및 양방향 암호화 트래픽(HTTPS) 해독이 가능한 'SSL 가시화 모듈' 직접 발주·보급(136.1억원 절감)으로 추산액 총 475억 원의 예산을 절감
2	<p>[최우수] (주) 김채원 교육연구사 (보) 전구슬 교육연구관</p>	<p>■ 「교과서 없는 AI 교과」, 교원 99명이 직접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체계 혁신) 학교자율시간·고교학점제 시행으로 AI 관련 과목 수요 급증했으나, 교과서 부재로 교사가 매 학기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16개 과목의 인정교과서·교육자료로 설계. 기본 개념은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실습 사례는 별책 교육 자료에 담아 교과서 개정 없이도 최신 내용을 수시 갱신 ○ (교원 주도 개발 및 예산 61.3% 절감) 현장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을 수업에 즉시 반영하고, 기존 출판사 개발 방식 대비 32억 원의 예산을 절감(61.3% 절감)하면서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대폭 경감함
3	<p>[최우수] (주) 조재현 사무관 (보) 김중범 주무관, (보) 박민영 사무관, (보) 박경신 주무관</p>	<p>■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원 과제 해결)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불법시설로 내몰리고 이행강제금·폐쇄 위기에 처했던 대안교육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체계 구축으로 해결함 ○ (1만 명 학습권 보호) 법령 동시 개정(대안교육기관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유형(가정형·일반형) 및 전용 용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약 91%(약 1만 명의 학생)가 이전이나 용도 변경 없이 쓰던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4	<p>[최우수] (주) 김재용 주무관 (보) 전민환 서기관, (보) 김혁연 교육연구관, (보) 홍용환 사무관, (보) 강동훈 교육연구사, (보) 서보승 주무관</p>	<p>■ 스무 살 방과후학교의 이유 있는 변화, 「방과후드림」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체감도 극대화) 초3 대상 '방과후 이용권(연 50만원)' 도입에 맞춰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로 자녀의 지원금 잔액, 사용 이력, 수강 과목 상세정보, 주간 시간표까지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함 ○ (학교 현장 난제 해결) 기존의 지원금 수기 차감 및 학부모 대상 지원금 잔액 안내 문제를 해결함. 간편결제 방식과 연계하여 지원금을 자동 차감·결제하고, K-에듀파인 연계 정산자료(엑셀)를 자동 생성하여 교직원의 반복·소모성 회계 및 민원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임 ○ (확산성 및 경제성) 민간 대비 낮은 사용료를 도입하여 학교 예산을 절감하며, '27년 참여 교육청 확대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완성함
5	<p>[우수] (주) 임동우 서기관 (보) 김승훈 주무관, (보) 조재현 사무관, (보) 박인환 사무관, (보) 진민택 사무관</p>	<p>■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사각지대 종합 관리) 사안별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미인·미등록 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전수조사(265개 기관)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감독 체계를 최초로 구축함 ○ (학습권 보호 및 공교육 확립)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경찰청 공조 및 컨설팅을 병행하여 편법·부실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유도함
6	<p>[우수] (주) 강효곤 사무관</p>	<p>■ 재외한국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초 행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 수기 행정의 전산화) 1963년 최초 설립 이후 60여년간 종이 장부와 엑셀 등 수기로 처리되어 분실·훼손 위험 및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컸던 해외 한국교육원의 행정 전반을 전산화함 ○ (투명성·효율성 향상) 교육원 업무를 4대 영역(실적·복무·문서·회계)으로 나누어 단계별 전산시스템을 구축·배포('25.10.~'27.1.)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완화하고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림

※ 수상자 : (주) 주기여자, (보) 보조기여자

1	전체 교육기관과 실시간 연동되는 '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
---	---

□ 추진배경

- 폭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기존 인력 중심 보안관제의 한계 발생, 교육기관의 탐지 장비 노후로 신종 사이버공격 탐지에 어려움 봉착
 - ※ 교육기관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 : ('21) 3억건 → ('25) 4.7억건 → ('26.9월) 4.1억건
 - ※ 2013년에 보급한 탐지장비(상용)가 노후되어 패치 적용 불가, 신종 사이버공격 탐지 불가

□ 주요성과

① '차세대 탐지장비' 보급으로 실시간 보안관제 연동 및 예산 339억 절감

- (내용)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실시간 연동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등의 최신 탐지규칙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장비 자체 개발 보급
 - ※ ('24년) 62개 기관(13.1억) → ('25년) 191개 기관(48.2억) → ('26년) 118개 기관(41.6억)
- (성과) 자체 개발한 고성능 '차세대 탐지장비' 보급을 통해 약 339억 예산 절감 효과 발생, 교육부 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연동 체계 구축

② 'SSL 가시화 모듈 보급'으로 사이버공격 탐지 범위 확대 및 예산 136.1억 절감

- (내용) 최근 암호화된 트래픽(HTTPS)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부가 직접 발주한 양방향 해독 처리가 가능한 S/W 보급
 - ※ ('25년) 17개 → ('26년) 23개, 11.4억 → ('27년) 131개, 61.6억 확보 → ('28년) 201개 기관 예정
- (성과) 교육기관 개별 구입보다 136.1억 예산 절감 효과 발생, 암호화된 통신 내부까지 검사하여 숨겨진 해킹 공격까지 탐지 가능

③ 중앙부처 최초 'AI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 및 해킹 사고 대응력 강화

- (내용) 교육부 자체 개발 'AI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이 탐지부터 판별·통보까지 수행토록 기능 개선, 더 정밀한 관제 고도화 추진
- (성과) AI 보안관제 실시 전보다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117% 증가, 적극적인 탐지·대응으로 해킹사고 사고 급감('23년 55건 → '26년 10월 9건)

□ 기대효과

- 향후 교육부에서 직접 발주한 'SSL 가시화 모듈'을 교육부 전체기관으로 확대 보급시(잔여 201개 기관), 최대 206억까지 추가 예산 절감 기대

□ 추진배경

- 학교 자율시간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AI 관련 과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설 과목 상당수는 교과서가 없어 교사가 수업 자료를 직접 제작
 - 학교·교사별 수업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학생의 AI 교육 경험 및 학습 기회 격차 우려
 - 이에, AI 관련 과목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과서 개발 및 지원 필요

□ 주요성과

- (최초) 교과서가 없던 인공지능(AI) 교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인정교과서·교육자료 개발 지원을 최초로 시행
 - 공모를 통해 초등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등 10개 시도 교육청 16개 과목을 동시 개발
- (구조) AI 등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정교과서 + 교육자료' 이원 구조를 국내 최초로 설계
 - 기본 개념은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실습 사례는 별책 교육자료(서책·웹)에 담아 교과서 개정 없이도 최신 내용을 수시 갱신
- (주체) 수업에 가장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원이 개발 전 과정을 주도하는 '교원 주도형' 방식 도입
 - ※ 집필위원 99명이 교육과정 분석부터 단원 구성·원고 집필·상호 검토까지 직접 수행

□ 기대효과

- (학생) 어느 학교에 다니든 인정교과서로 기본원리를 익히고 교육자료로 최신 기술을 배워, 교실 수업과 실제 기술의 간극 해소
- (교사) 매 학기 자료를 새로 만들던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설계와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집필 경험은 연수·수업 나눔으로 확산
- (제도)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과서 모델로, 다른 교과·분야에 그대로 적용 가능
 - ※ ('27.1학기) 시범 적용 → ('27.하) 인정 심의 → ('28.3.) 학교 수업 적용

□ 추진배경

- (제도 사각지대 발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1.)으로 대안 교육기관은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었으나, 관계법령에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기준이 없어 제도 사각지대 발생
 - ※ 대안교육기관은 사도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하며, 261개 기관에 약 13,000명 학생 재학중(‘26.)
- ⇒ 제도개선 논의가 4년간 표류된 와중, 일부 기관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제재조치로 폐쇄 위기에 직면하여 학습권 보호에 중차대한 위기 발생
 - ※ **【언론보도】** “학교 외에서 운영은 불법” 판결에 전국 대안교육기관 폐쇄위기(2023.9.10, 연합뉴스)

□ 주요성과

- (범부처 협의체계 구축) 국회·교육부·국토부·교육청·대안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 청취 및 법령 정비 방향 논의
 - ※ 국회·교육부·국토부·교육청·대안교육 단체 등과 11회의 대면 협의 및 상시 유선 협의
- (교육현장 피해 예방)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재조치로 인한 교육기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행정조치 일시 유예’ 요청(‘26.1.)
- (제도 개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국토부가 함께 대안교육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동시 입법예고(‘26.7.)
 - 대안교육기관의 약 91%(약 1만명 재원)가 용도변경·이전 없이 현재 사용중인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기관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후속 지원) 약 9%의 기관은 용도변경·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3년)을 확보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예정

□ 기대효과

- 대안교육기관 제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 위에 대안교육 제도 활성화 기대

□ 추진 배경

- '26년 1학기부터 초3 학생에게 연 50만원 수준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하 "이용권")' 도입 결정
 -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운동네 초등돌봄 도입' 국정과제 선정(101-2)
- 이용권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초3 학부모가 자녀의 지원금 현황을 편하게 확인하는 플랫폼 마련 필요
 - ※ (기존 방과후 지원금 운영 방식) 학생이 납부할 수강료에서 지원금 잔액만큼을 학교가 일일이 차감하여 운영, 학부모는 자녀의 지원금 현황을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여 확인

□ 추진 내용

- 간편결제 연계 '방과후드림' 플랫폼을 개발 도입, 담당자가 학생에게 지원금을 배정 하면 플랫폼이 이용권 사용액·실결제 필요액을 자동 계산하여 결제 처리하도록 개선
 - ※ 공공 간편결제 인프라 '제로페이' 운영 주체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업
- 학부모는 모바일로 가입·접속(앱 설치 불필요)하여, 방과후 지원금 잔액·사용 이력 및 주간 시간표 등 자녀의 방과후학교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 주요 성과

- (학교 업무 효율화) 플랫폼이 지원금을 반영하여 실 결제 필요 금액을 자동 계산·결제하므로, 학생별 잔액을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 경감
 - ※ 방과후드림 내 결제 이력을 바탕으로, 수강료 정산·회계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엑셀)도 제공
- (학부모 편의 제고) 자녀의 지원금 정보뿐만 아니라, 수강하는 과목의 세부 정보(장소·수강료 등)와 주간 시간표까지 한눈에 확인
 - ※ '알림톡(카카오톡)' 기능을 통해 학교에서 안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안내 가능

□ 기대효과

- '27년부터 이용권 지원 대상이 초3·4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학생·학부모에게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높아진 초등돌봄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전국 공통 활용 가능한 방과후 업무 지원 플랫폼으로서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추후에도 현장 담당자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 개선 추진 예정

□ 추진배경

-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일부 시설에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액의 교육비를 받는 사례 지속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불분명한 개념 및 운영 상황으로 인해 소재지, 교육내용 등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부족

□ 주요성과

-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 수립을 통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25.11.)
- 대안교육, 국제교육, 평생교육 등 목적을 불문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전수조사 실시('25.12.~)
- 기존 「초·중등교육법」 상 폐쇄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지원('26.5.),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6.11.)
- 조치 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안내('26.4.) 하고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복귀 유도 및 관련 지원 강화(상시)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제재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27.上~)

※ 과징금 신설, 기존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 강화, 법령 위반사항 근거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 근거 마련,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 등 정책연구 추진

□ 기대효과

- 사회통념에 벗어난 편향된 교육, 외국어 중심 입시교육 등 불안정하고 편협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설립 인가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 국가 교육과정, 학생의 전인적 성장 등 공교육 체계 확립

6 재외한국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초**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환경 및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재외한국교육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업무량과 복잡성은 증가된 반면, 업무관리 대부분은 수기로 처리
 - ※ '63년 한국교육원 최초 신설 이래 60여년 동안 교육원의 행정은 모두 수기로 진행
 - 교육원의 복무 및 문서, 회계 관리 등 모든 행정이 수기(엑셀 등)로 관리 운용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매우 낮은 상황
 - ※ 수기 중심의 업무 처리로 체계적인 업무 및 복무 관리가 어려웠고, 문서 아카이브 부재로 과거 자료 및 업무 경과 파악, 업무 인수·인계, 회계 관리 등 어려움 지속 발생

□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

1 추진 방향

- (추진 범위) 한국교육원 업무를 4가지(문서·회계·복무·실적)로 범주화하고 예산 및 시급성 등을 고려, 단계별 개발* 및 적용 추진('25.10월~)
 - * ①단계 실적관리('25.10~)→②단계 복무관리('26.1~)→③단계 문서관리('26.9~)→④단계 회계관리('27.1~)

2 세부 추진 내용

- ① **완료** (실적 관리) 교육원 성과평가 양식과 자체(부서)평가 시 활용하는 주요 통계*를 월별 또는 수시 입력 → 특정시점 또는 누적 활용 가능('25.10~)
- ② **완료** (복무 관리) 교육부 파견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교육원 직원들의 근무상황 및 출장 등에 대해 신청-결재-관리 등 기능 구현('26.1~)
- ③ **완료** (문서 관리) 수기 처리하는 교육원 자체 생산 및 접수문서를 법정 양식으로 제공, 문서 관리 전산화 및 검색 · 조회 기능 제공('26.9~)
- ④ **추진중** (회계 관리) 수입(세입, 수입일계 등) 및 지출(세출, 품의-원인행위-지출)이 회계 연도별로 일관성 있는 처리를 위해 법정 양식과 관리 기능 제공('27.1~)

※ 교육원별 화폐 단위, 환율 변동, 운용 시간 등이 상이하여 통합적인 회계시스템 개발 어려움 → 교육원 유경험 직원 중심의 TF를 구성, 이론적 프로세스 정리 후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 4대 업무시스템 개발을 통해 재외한국교육원의 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
 - 국력 제고를 위한 해외 한국어보급 등의 교육원 역할 강화에 기여
 - ※ 도입 성과 등을 고려, 재외 한국학교 등으로 활용 기관 확대 추진

붙임 4

교육정상화 우수부서(6건)

연번	수상부서 (담당자명)	과제명	주요 성과
1	평생학습정책과 (박인환 사무관)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신고 플랫폼 기능 개선 (간편인증, 포상금 동시신청) 및 신고포상금 인상을 내용으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26.7)
2	학생지원총괄과 (이은실 사무관)	교복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조사 및 분석(2.27~4.30)를 통해 가격 적정성 검토 및 생활복(5개품목)에 대한 상한가 마련(26.5) 입찰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6.5), 교복가격 정보공개 강화(26.9)
3	영유아정책총괄과 (이혜빈 사무관)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해 영아반만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 및 영아반 전환 지원* * 전문가, 지자체, 어린이집 현장 의견 수렴(3.18, 5.7, 5.21, 5.26, 6.19)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수요조사(4.10~4.17), 어린이집 의견수렴(5.7, 5.26, 5.27, 6.19)
4	영유아사교육대응팀 (조진행 사무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대상 학원의 과도한 모집 시험(4, 7세고사)를 금지하도록 학원법 개정(26.3) 0~5세 대상, 정부 차원의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최초 추진(26.10) → 결과발표(27.3)
5	예산담당관 (박준혁 사무관)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국고보조사업 연간점검계획 수립(26.5), 상반기 자체 점검 실시(26.6, 총 87건 중 24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수급 심의위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7~8월), 기획처 합동 현장점검(7월) 실시
6	학생건강정책과 (박예린 주무관)	학교급식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6.8)